

언론인 초청 국정과제간담회  
(플라자호텔 4층 난초홀)

---

##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

---

2004. 12. 17(금)

정 책 기 획 위 원 회

## ◇ 목 차 ◇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.....            | 1  |
| 2. 참여정부 국정운영방식 .....             | 2  |
| 3. 국정과제위원회 구성과 장점 .....          | 4  |
| 4. 국정과제위원회 운영현황 .....            | 5  |
| 5. 주요 추진실적 .....                 | 6  |
| 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별첨1> 국정과제위원회 현황 .....           | 9  |
| <별첨2>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현황 .....     | 10 |
| <별첨3> 국정과제 관련 주요 개혁입법 추진현황 ..... | 14 |

## 1.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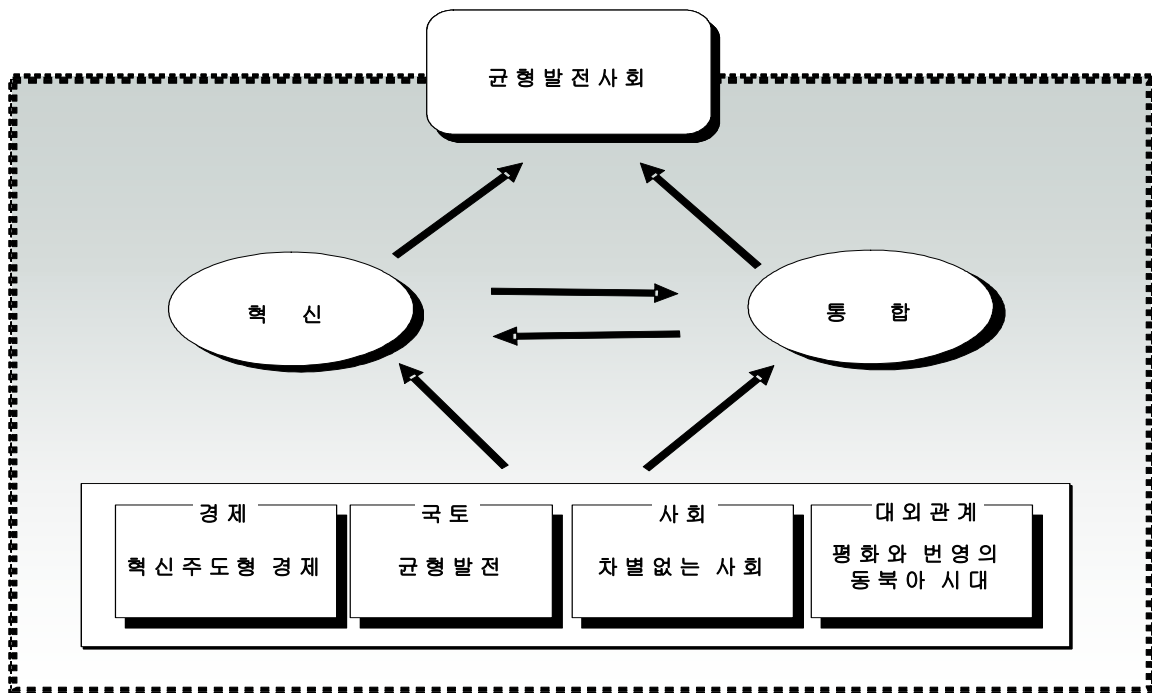
### (1) 새로운 비전 : 혁신과 통합의 『균형발전사회』

- ☐ 성장과 분배, 인간과 환경, 지역간, 성·계층·세대간, 정부-시장-시민사회의 균형 등으로 균형발전사회의 기반 구축
  - 하향평준화가 아닌 총체적 상향운동의 발전사회 지향
    - ※ 기존의 불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새로운 세계화·정보화시대에 유효성을 상실
- ☐ 균형발전사회의 양대 축으로 “혁신”과 “통합”을 설정, 한국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 확보
  -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
  - 지역·계층간 통합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, 인간적 삶의 여건 조성을 통해 사회적 통합기반 구축

### (2) 분야별 정책 추진목표

- ☐ 경제 :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
- ☐ 국토 : 국토 대개조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
- ☐ 사회 :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차별없는 사회 구현
- ☐ 대외관계 :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현

### (3) 5대 실천전략 : 지속적 개방·개혁, 지방화·국토균형발전, 사회통합·차별시정, 長期주의, 原則의 정부



## 2.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식

(1)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달성해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과제를 선정, 중점 추진

- 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

(2) 국가전략과제 추진 패러다임을 『參與型』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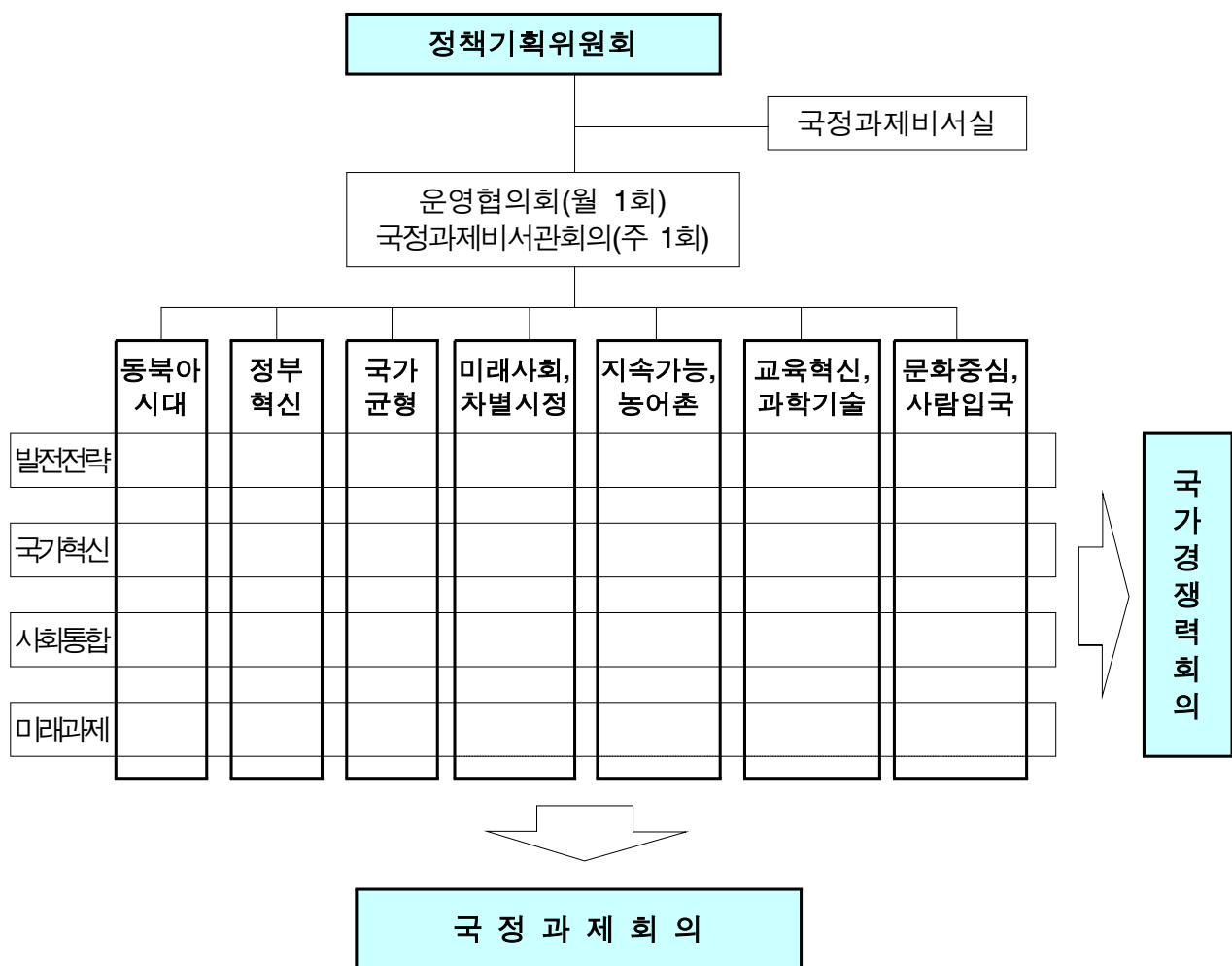
- ☐ 참여형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『국정과제위원회』를 설치·운영(별첨1)
  - 100대 국정과제(별첨2)의 기획단계부터 정부부처,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,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
    - ※ 논의 및 결정단계 : 실무TF ⇒ 전문위 ⇒ 본위원회 ⇒ 대통령주재 「국정과제회의」
    - ※ 단계별로 필요시 간담회,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

### (3) 국가전략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

□ 縱的으로는 국정과제, 橫的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추진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

○ 정책기획위원회가 11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 관리

#### 〈참고〉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



#### ※ 정책기획위원회 주요기능

-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의 종합 관리·조정
- 국정과제회의, 국정과제조정회의 및 국가경쟁력회의 운영(대통령주재)
-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등

### 3. 국정과제위원회 구성과 장점

#### (1) 개별 국정과제위원회 구성 · 운영

- ☐ 산 · 학 · 연 민간전문가, 정부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산하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(기획단)을 설치 · 운영
- ☐ 국정과제의 추진단계별로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, 개별과제의 기획과 정책화작업을 추진

##### 〈 국정과제 추진단계별 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역할 〉

- 기획단계 : 위원회의 기획과정에 부처가 실행가능성 등 사전검증작업 협조
- 정책화단계 : 위원회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마련
- 실행단계 : 부처가 중심이 되어 세부정책 추진

#### (2) 국정과제위원회의 장점과 효율성

- ☐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의 기획 · 관리에 효율적
  - 정부부처의 경우 그 특성상 주로 일상적인 단기현안과제 수행에 치중하여 장기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
  - ※ 장관 평균재임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아 중장기 과제 수행이 더욱 어려움
- ☐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
  - 정부, 학계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,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제고
- ☐ 행정의 민주화와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가능
  - 부처이기주의, 보신주의 등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며, 각 부문간 이견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 가능

#### 4. 국정과제위원회 운영현황

(1) 조직 : 위원회의 업무, 기능 조정에 따라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

□ 11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지속가능위(00. 9월), 농특위(02. 1월)는 이전 정부부터 운영 중

<예1>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: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서 ‘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’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(04. 6. 21)

<예2>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: 부동산정책을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

(2) 인력 :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

□ 정책기획위와 11개 국정과제위의 전체직원은 총 210명 내외이며 위원회당 평균 18명 수준

○ 정부부처 인력의 경우, 별도정원의 형태로 파견 받고 있어 부처의 인력운영과 업무추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

※ 04. 12월말 현재 정책기획위원회와 11개 국정과제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총 130명 내외(위원회당 평균 11명 수준)

(3) 예산 :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편성·운영

□ 정책기획위원회와 11개 국정과제위원회의 05년 총 운영예산(안)은 약 240억원으로 위원회당 평균 20억원 수준

※ 일부에서는 05년 국정과제위원회 예산이 1,500억원에 이르며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, 이는 문화중심도시위 운영예산에 ‘아시아문화 전당’ 건립을 위한 사업예산(1,007억원)을 포함시킨데 따른 오해에서 연유

□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음

## 5. 주요 추진실적

- ◇ 지난 2년간 국정과제 로드맵 작업 추진,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참여정부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큰 틀을 마련
  - 04. 12월 현재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중 26개 과제(신행정수도 관련 3개과제 제외)에 대한 정책화작업을 완료, 부처 실행단계로 진입
    - \* 06년까지는 100대 국정과제의 정책화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, 절반수준인 48개과제는 참여정부 임기내에 실행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
  - 04. 12. 15 현재 지방분권특별법·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, 지방교부세법·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총 26개 개혁입법 제·개정작업을 완료
    - \* 04. 12. 15 이후 한국투자공사법, 국민연금법, 갈등관리기본법 등 총 37개 개혁입법 제·개정 작업을 추진 중(별첨3)
- ◇ 05년에는 ‘참여정부 2년 평가작업’을 계기로 전체 로드맵의 절반이 넘는 59개 국정과제의 정책화작업을 마무리하여 부처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추진을 가속화할 계획(06년까지 100대과제 전체의 정책화작업 완료)
  - 특히 05. 1월 신행정수도 대안 확정과 연계, 공공기관 지방이전,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조기에 마련
  - 05. 상반기 중 정부혁신·지방분권 관련 20개 주요 핵심과제의 정책화작업을 완료하고, 점검평가체제로 전환
  -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,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등 低출산·고령화시대의 대응전략을 구체화
  - 6대차별(여성, 장애인, 학력, 연령, 비정규직, 외국인근로자) 시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

## (1)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 및 국정과제조정회의 운영

□ 04.12월 현재 총 5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, 분야별 국정과제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

□ 지난 8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조정회의를 신설하여,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·관리하고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

※ 정책기획위원장, 국정과제위원장, 비서실장, 정책실장, 비서실내 관련 수석·보좌관 등 참석(04.11월말 현재 총 5차례 회의 개최)

## (2) 주요 추진실적

□ 지방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기반 구축

○ 양대 특별법 제정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지방분권특별법

○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
- 혁신도시 건설,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방침 마련
- 新활력지역(낙후지역) 선정,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등

□ 정부혁신·지방분권 작업의 가속화

○ 정부기능 재조정

- 금융감독체계 개편, 외교통상기능 강화방안 마련
- 차별시정기구 일원화, 소비자보호·공정거래기능 재조정 등

○ 정부운영시스템 효율화

-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, 통합전산환경 구축

○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

- 중앙권한의 대폭 지방이양을 위한 「지방분권특별법」 제정
-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, 지방분권5개년종합실행계획 확정
-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: 양여금제도 폐지, 교부세율 인상, 분권교부세 신설 등

□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 추진

- 『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』 마련
- 3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: 인천, 부산, 광양
- 외국인투자제도 전면 개편 : Invest Korea 출범, 현금보조제 도입
- 한국투자공사법(안) 마련,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

□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통합노력 강화

-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: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
- 종합부동산세 도입 : 2005년 시행
- 사회적일자리 창출, EITC 등 근로빈곤층 종합대책 수립
- 장애인 · 여성 · 빈곤아동 ·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 추진

□ 저출산 · 고령화 사회에 대비

-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육아지원방안 수립
- 국민연금법 개정(안) 마련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검토
-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마련
-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추진,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검토 등

□ 지속적 개혁을 통한 혁신주도형 高생산성 국가로 전환 추구

- 국가혁신체계(NIS) 구축,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정비
- 지역혁신협의회 구축,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
- 08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혁방안 마련 등 교육혁신 추진
-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

별첨1

# 국정과제위원회 현황

(04. 12월 현재)

| 위원회<br>(위원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족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립 근거<br>(법적성격)                        | 조 직<br>(민간위원 수)           | 사무국<br>(주관부처)   | 예산(억원)<br>'04년/'05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b>정책기획</b><br>(이정우 BH<br>대통령 정책특보)     | 89.6(21세기<br>95.6(정책기획<br>04.1(개정)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00)                | 사무처             | 25.2/22.9           |
| <b>동북아</b><br>(문정인)                     | 03.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3)/<br>7개 전문위(105) | 기획조정실<br>(재경부)  | 16.6/21.0           |
| <b>정부혁신</b><br>(윤성식)                    | 03.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분권특별법(자문)<br>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| 본 위원회(16)/<br>6개 전문위(95)  | 기획운영실<br>(행자부)  | 29.8/40.1           |
| <b>국가균형</b><br>(성경룡)                    | 03.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균형발전특별법<br>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3)/<br>4개 전문위(77)  | 기획단<br>(산자부)    | 36.9/32.9           |
| <b>미래사회</b><br>(김용익)                    | 04.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23)/<br>4개 전문위(45)  | 기획조정실           | 13.7/16.3           |
| <b>지속가능</b><br>(고철환)                    | 00.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74)/<br>5개 전문위(77)  | 기획운영실           | 13.0/16.0           |
| <b>차별시정</b><br>(이정우 위원장<br>겸임)          | 03.5(T/F)<br>04. 6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5)/<br>3개 전문위(45)  | 기획운영실           | 7.6/15.6            |
| <b>교육혁신</b><br>(전성은)                    | 03.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21)/<br>4개 전문위(47)  | 사무국<br>(교육부)    | 14.6/17.1           |
| <b>농어촌</b><br>(장원석)                     | 02.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<br>위원회설치 및 운영<br>등에관한법률(협의) | 본 위원회(21)/<br>3개 분과위(50)  | 사무국<br>(농림부)    | 11.8/11.8           |
| <b>과학기술</b><br>(박기영 BH정보<br>과기보좌관 단장겸임) | 91. 4(자문회의)<br>03. 5(기획단)          | 대통령훈령<br>기획단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위원회(27)                 | 기획단<br>(과기자문회의) | 21.9/21.1           |
| <b>문화중심</b><br>(송기숙)                    | 04.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<br>위원회규정(자문)  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6)                 | 문화부<br>기획단      | 10.0/24.0           |
| <b>사람입국<br/>신경쟁력</b><br>(문국현)           | 04.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기획<br>위원회 규정 (자문)                    | 본 위원회(13)                 | 정책기획위<br>사무지원   | 정책기획위<br>예산지원       |

**별첨2**
**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현황**

|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【동북아시아위원회(13)】</b>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략기획                     | 1. 동북아시아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                  | 외교부, 통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           | 외교부, 통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화구축                     | 3.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전략                     | 통일부, 외교부<br>국방부, 건교부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적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| 외교부, 통일부<br>국방부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제주도의 동북아 평화거점화 대책                      | 통일부, 외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번영<br>(경쟁력 강화)           | 6. 금융관련 제도개혁 및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금감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금융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 리더쉽 구축                  | 재경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공항만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, 해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기업·인력 육성  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교육부<br>행자부, 건교부<br>해수부, 관세청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산자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동체 형성                   | 11. 동북아 에너지·환경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교·산자·환경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동북아 경제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교부, 산자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교부, 문화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(23)】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개혁                     | 14.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및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       | 감사원, 행자부<br>국조실, 예산처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민원제도 개선               | 행자부, 고충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| 행자부, 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.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              | 행자부, 고충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          | 행자부, 부방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.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·분권화                     | 인사위, 행자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.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사개혁                     | 21.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| 인사위, 행자부<br>예산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2. 투명·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    | 인사위, 행자부<br>예산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.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                  | 인사위, 행자부, 예산처                    |

|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처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자정부                     | 24.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             | 행자부, 건교부<br>복지부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             | 행자부, 건교부<br>복지부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.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             | 행자부, 건교부<br>복지부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.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| 행자부, 건교부<br>복지부 등     |
| 지방분권                     | 28.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   | 행자부, 교육부<br>감사원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.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    | 교육부, 행자부<br>경찰청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.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             | 행자부, 교육부<br>경찰청 등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.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  | 행자부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. 지방의정활동기반 정비·강화            | 행자부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. 중앙-지방,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    | 행자부, 교육부<br>감사원, 각 부처 |
| 재정세제                     | 34. 세제개편     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행자부<br>예산처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.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 | 행자부, 재경부<br>예산처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.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 도입 | 예산처, 행자부<br>재경부       |
| <b>【국가균형발전위원회(16)】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혁신체계<br>구축과<br>혁신역량강화  | 37.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        | 산자부, 교육부,<br>과기부, 행자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.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       | 교육부, 산자부,<br>과기부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. 신산학협력 모델의 정립 및 확산         | 산자부, 교육부,<br>과기부 등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. 대덕 R&D 특구 육성              | 과기부, 산자부,<br>중기청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. 국가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       | 산자부, 과기부              |
| 자립형<br>지방화를 위한<br>지역산업육성 | 42.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               | 산자부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. 문화·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    | 문광부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4. 낙후지역 개발방안 수립              | 행자부, 농림부,<br>건교부      |

|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처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.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        | 산자부, 전 부처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.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       | 예산처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7.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제 확립         | 전부처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.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             | 재경부                     |
| 국토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9. 신국토구상 수립·추진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.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         | 건교부, 산자부, 재경부, 환경부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.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.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           | 산자부, 재경부, 건교부           |
| <b>【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(5)】 : 현재 위헌결정(04.10.21)으로 소관 로드맵 삭제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 행정수도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. 추진체계 정비                  | 건교부, 행자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. 주요국가기관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 | 건교부, 행자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. 입지선정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. 개발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 시행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7. 국민공감대 확산                 | 국정홍보처                   |
| <b>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(9)】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구·가족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. 고령사회대비 기본대책 및 재정확충방안 마련  | 복지부, 여성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9. 출산력 제고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| 복지부, 여성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.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            | 복지부, 교육부                |
| 고용·인력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.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2. 고용기회 확대 및 이민대책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복지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3.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4. 교육·여가·문화향상, 주거환경개선       | 복지부, 문광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5.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6.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| 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|
| <b>【지속가능발전위원회(6)】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갈등관리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7.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| 국조실, 행자부, 환경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.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적용        | 국조실, 행자부, 건교부, 환경부      |
| 에너지·산업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9.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     | 환경부, 산자부, 국조실           |
| 물·국토·자연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.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           | 환경부, 건교부, 국조실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.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의 구축    | 환경부, 건교부, 해수부, 농림부      |
| 지속가능발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.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            | 환경부, 산자부, 건교부, 행자부, 교육부 |

|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처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b>【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(12)】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서민주거 안정                   | 73.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 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행자부, 건교부, 국세청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4. 주거복지정책 추진 지원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5.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                | 재경부, 건교부           |
| 세원투명성 및 형평성 강화            | 76. 자영사업자 소득과약 강화지원               | 재경부, 국세청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.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, 국세청           |
|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           | 78.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, 복지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9.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, 노동부           |
| 근로자 자산형성지원                | 80.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| 노동·재경·예산처          |
| 적극적 차별시정 추진               | 81.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                | 노동·교육·행자부 등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2. 적극적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|
| 소외계층 보호지원 강화              | 83.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 지원                | 복지·교육·여성부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4.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    | 복지부, 건교부           |
| <b>【교육혁신위원회(4)】</b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교육혁신                    | 85. 학교교육체제 혁신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, 복지부           |
| 대학교육혁신                    | 86. 대학입학제도 개혁 및 대학교육력 제고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 |
| 직업·평생교육혁신                 | 87. 직업교육체제 혁신                     | 교육·산자·노동부          |
| 지역교육혁신                    | 88. 지역교육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, 행자부           |
| <b>【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(5)】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정책                      | 89. 농업인력 정예화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. 농지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. 쌀 산업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부                |
| 농가소득정책                    | 92. 직접지불제 확충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부                |
| 농촌정책                      | 93. 농촌사회 안전망 및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      | 복지부, 농림부           |
| <b>【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(5)】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국가혁신체계 (NIS) 구축           | 94.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역량 강화             | 과기, 산자, 정통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.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혁신지원체제 구축     | 과기·산자·정통부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6. 산학협력 및 기술혁신 확산체계 구축           | 교육, 과기, 산자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7.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혁신          | 교육부, 과기부, 행자부, 산자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8.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의 연계 강화             | 과기부                |
| <b>【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(2)】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사람입국                      | 99. 직장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 생활 혁신 | 노동부, 문광부, 농림부, 환경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. 근로자 과로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        | 노동·재경·행자부 등        |

## 국정과제 관련 주요 개혁입법 추진현황 (04.12.15 현재)

### 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26개 개혁입법 제·개정 완료

|             | 법 률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<br>(7개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동북아시대(1) : 자유무역지역등의지정에관한법률</li> <li>▪ 정부혁신(3) : 지방분권특별법,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, 주민투표법</li> <li>▪ 국가균형(2)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지역특화발전특구법</li> <li>▪ 사회통합(1) : 국민임대주택특별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정<br>(19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동북아시대(4) : 외국인투자촉진법, 화물자동차사업법, 조세특례제한법, 간접투자자산운용법</li> <li>▪ 정부혁신(7) : 지방교부세법, 지방양여금폐지법, 기금관리기본법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, 국가공무원법, 정부조직법, 지방재정법</li> <li>▪ 사회통합(8) : 국민건강증진법,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, 상속세법 등 세법(4개), 지방세법, 세무사법</li> </ul> |

### ■ 대덕연구개발특구법 등 총 37개 개혁입법 제·개정작업 추진 중

| 위원회            | 법 률 (안)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북아 시대<br>(5개) | 한국투자공사법,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 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,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(3개) | 외국인투자촉진법(제2차), 화물유통촉진법(2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혁신<br>(17개)  | 지방일괄이양법, 공공감사에관한법률, 자원봉사활동진흥법, 정보기술관리혁신법, 개인정보보호법(5개)            | 지방자치법, 부패방지법, 공직자윤리법,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, 지방재정법, 지방세법, 법인세법, 지방교부세법, 보조금법, 정부조직법,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(12개) |
| 국가균형<br>(1개)   |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지정및육성에관한 특별법(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사회<br>(3개)   |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, 교통약자의이동 편의증진법(2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법(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속가능(1개)       | 갈등관리기본법(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별시정<br>(8개)   | 종합부동산세법,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(2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자복지기본법,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, 국민건강보험법, 부동산중개업법, 증권거래법, 특정금융거래보고법(6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어촌(2개)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지법, 양곡관리법(2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 37개          | 14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